

청년층 일자리 문제 접근 방법

이 규 용*

청년층(15~29세) 생산가능인구 10명 중 4명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2000년 초중반과 비교해도 고용률은 4%포인트 가량 하락한 상태이다. 일할 수 있는 청년층 중 일을 하고 있는 청년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나빠지고 있어 이들의 고용 문제가 구조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통계를 통해 확인하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청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층 일자리 중 비정규직이 34.6%로 3개의 일자리 중 1개 정도이며, 20대 청년층 일자리의 27.0%가 중위임금 2/3 이하인 저임금 일자리이다. 청년층 특성상 직업탐색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으나, 일자리 계층 간 이동성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진입시기의 일자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으며 재정투자 규모도 확대되어 왔다. 2010년 이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을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내일 만들기,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청년 창업촉진, 청년 해외취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 들어 직업교육 및 훈련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 예산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2015년 청년 일자리 대책 예산을 보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규모는 4,964억 원이며, 수혜계층이 청년층 50% 이상인 사업예산은 1조 3,965억 원이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지원,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지원, 창업지원 등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숫자로도 133개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측면이 크지만 청년층이 갖는 특수성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둔화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경력직 중심의 노동수요구조 변화,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구조의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leeky@kli.re.kr).

문제이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이기도 하다. 고학력화는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로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공급측 요인이기도 하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의 적절성을 떠나 최근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이며 사회적 환경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과잉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청년층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높은 진학률을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혹은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저기능이 낮은 질의 일자리로 유입되듯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평판을 무시하기 어려움은 뒤로 하더라도 이 또한 낮은 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를 위해 스펙을 갖추는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전통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나 경제산업 정책의 틀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정비하여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해 노동시장 이행단계별 맞춤형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공급자 방식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이고 체감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긴박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인구변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층이 건실하여야만 한국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지탱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 고용 문제는 우리 모두의 상생을 위한 미래의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든 계층에게 일자리 문제는 중요하며, 따라서 특정 계층의 희생이 아닌 모두의 양보와 협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한시적으로 보다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한시적 청년고용할당제나 의무제, 청년층 노동시장 정착을 위한 노동시장 초기 경력 형성과 경제적 지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전략과 같은 일자리 창출 상생모델, 청년 니트(NEET)에 대한 사회통합적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컨텐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과 갈등이 더 컸었던 데 기인하기 때문에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비롯하여 한국의 노동시장이 보다 건실해지기 위해서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며,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창의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며, 인적자본투자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답이 될 것이다. **KLI**